

민주 전당대회 12월 이후로 가닥

정기국회 상황따라 내년 1월로 늦출 수도

개최시기 놓고 주·비주류 벌써부터 신경전

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정기국회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르면 12월 중순께, 늦어지면 1월 중순이나 개회될 전망이며 이를 둘러싸고 당내 주류 및 비주류 간의 신경전도 본격 점화하고 있다.

7일 민주당 해심 관계자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전례가 없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순이나 내년 1월에 전대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회기 내에 마무리되면 12월 중 전대를 개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안과 예산안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전대를 1월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12월 이후 전대 개최로 방향을 잡은 것은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에 전대를 열 경우 국민으로부터 따온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정기국회 기간 여당과의 입법부 쟁에 필요한 소속 의원들의 내오를 유지하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 전

대를 개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법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12월 말까지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도 감안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회기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여야의 충돌 없이 정기국회가 마무리 된다 해도 전국 순회 연설회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무리 빨라

이와 관련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당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인하·민생예산 등 장점 현안 산적

여야 8월 국회도 순탄치 않다

‘한진重 청문회’ 17일 개최·사법개혁특위 재구성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역 합의했지만 행정법안이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9일, 29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로

여야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오는 17일 한진 중공업 청문회를 열고 교섭단체별로 4명씩, 8명으로 사법개혁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 법안은 8월 중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 야

최대 행정법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인권법 등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합의된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와 대학등록금 법안 처리 등을 놓고도 주가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한미 FTA와 관련, 한나라당은 8월 국회 상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체에서 ‘10+2 재제 협상안’을 논의하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도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소득에 연계한 단계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가경정예산 분석 문제도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어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인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 회기 중 추경을 편성해 수해 복구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도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어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인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 회기 중 추경을 편성해 수해 복구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특위 재가동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200여 일째 코레인에서 고공 능성 중인 민주당 동당 김진숙 지도위원의 증인 체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총영표 원내대변인은 7일 “(검찰총장) 청문회 말미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중수부 폐지와 특수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저축은행 국조특위에서 검찰이 기관보고를 거부했다”며 “이런 것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냄새로 돋우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냄새로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율하고 있습니다.

FAX: 02-1772 011-602-2532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산월IC 교통광장 접コーナ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여건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애마: 470,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니수,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대지: 250평 (30×8코너)

기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급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금매

▶ 대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물: 300평, 200평, 200평

▶ 높이: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문의: 016-644-4265, FAX: 523-8558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 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국회 출석 불응 검사 6명 고발키로

저축銀 국조특위, 성영훈 광주지검장·김진수 목포지검장 등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검찰총기 증인 6명을 고발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를 다시 구성,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와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회가 고발한 대상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

지검장, 박정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검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관증인들은 전원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여야는 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6명을 불출석의 죄, 국회 모유의 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 특위 위원장은 “증인 6명은 기관보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

출석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고발조치를 의결한 뒤 “이번 불출석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은 만나 국정조사 위원회 이름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2003년 국정감사 이후 8년 만이고, 현직 검찰 기관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특위 위원장은 “증인 6명은 기관보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고발조치를 의결한 뒤 “이번 불출석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은 만나 국정조사 위원회 이름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난 2002년 9월~2004년 12월 산업기능원으로 경기도 포천의 K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있지만, 그가 자택인 대치동에서 포천으로 출퇴근해야 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회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당시 여당 의원들이 법무장관에 기용돼 지방선거를 관리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권 후보자의 장남

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회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당시 여당 의원들이 법무장관에 기용돼 지방선거를 관리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원장은 6일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도록 하는 글자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조404억원을 비롯해 2016년까지 5년간 모두 7조7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가 라운지

이정현 “국회 불출석 ‘솜방망이’ 처벌”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도 검찰의 처벌이 미미해 국회 업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처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을 자키지 않아 이뤄진 고발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44건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올해 6월 현재 44건 등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 중 59건으로 48%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4건 중 10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특히 고발 사건 211건 중 절반이 넘는 55.5%인 117건에 대해 혐의없음(63건), 각하(22건), 기소유예(17건)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86건 중에서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6.7%(23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선, 초중 무상급식 법제화 추진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원장은 6일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학년도에 전교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고 이를 중성화에 따라 배분되는 장학금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6일 대학 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학년도에 전교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고 이를 중성화에 따라 배분되는 장학금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거증 대261, 건239 3평7천 296평 주택및 흥정금 대191.8 건209 273평 3억7천 39평7천 6평7천 최저가 50억	신인증 대385m2, 건191m2 5평7천 3억7천 39평7천 6평7천 최저가 35억7천	종합동 대201m2, 242m2 5평